

탄핵 후 정국 주도권 잡기...정치권 수싸움

민주당 조기 대선엔 유리 판단 탄핵 집중·개헌정국 경제 국민연방·비박계 등 개헌 함께 주장 대선 판 뒤집기 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 이후 정국을 놓고 정치권에 미묘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미래 권력을 놓고 정치 세력들이 본격적인 수위기에 들어간 셈이다.

우선 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추미애 지도부는 '탄핵→조기 대선 직행'의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개헌 등을 고려로 제3지대에서 대선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비박 진영, 당내 비주류 세력 등을 겨냥,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개헌을 고려로 하는 정계개편 움직임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의 조짐을 흐리는 '장애물'로 규정하는가 하면 국정 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새누리당 세력과 손을 잡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대학생 시국대회에서 "개헌론과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교묘한 몰타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과 공범이었던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 타기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별써부터 '우리에게 유리한 개헌 논의'를 해야겠다"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이 있는데 이를 다 물리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비박 진영 등에서는 개헌 등을 고려로 제3지대에서 친문과 친박 진영 등 극단 세력을 제외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친박과 친문 진영을 하나의 프레임에 묶어두고 개헌을 고려로 제3지대에서 대선 판도를 뒤바꿔준다는 것이다.

당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개헌도 하지 않겠다', '총리도 먼저 뽑지 마라'고 한다"며 "탄핵안도 관허 품으로 제출해놓고 부결하려는 건지 의심

스럽다. 부결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 같으나"고 직격탄을 날렸다.

순학규 전 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총리 논의 불가 방침에 "나라를 책임질 야당이 이따위로 수습책을 내놓느냐"며 "탄핵과 개헌은 같이 갈 수 있다. 국회는 탄핵을 통과시킨 뒤 체제 변화(개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화 전 의장도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세팅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개헌"이라고 강조한 뒤 "비박권 정상 시대" 후보와 다른 양극의 후보가 한번 싸워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부겸, 박영 선, 박병석 의원 등 민주당 비주류 진영에서도 당내 주류 세력을 견제하며 개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촛불 든 野 잠룡들 '메시지' 전쟁

문재인 "가짜 보수 태워버리자"...안철수 "기득권 정치 타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드가 고조되면서 지난 26일 5차 촛불 집회에서 야권 대선주자들은 강력한 메시지 경쟁을 이어갔다.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면서 내년 말로 잡혀있는 대선 일정까지 불투명해지자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주자들은 집회에서 정국 수습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대통령 리더십 제고 방안을 강조하며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반칙·특권 일삼고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온 가짜보수 정치세력을 거대한 햇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국민의당은 3단계 수습방안과 박 대통령 퇴진 당론화를 가장 먼저 제시하는 등 이번 정국을 누구보다 앞서 선도했다"며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공격적인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는데 모든 분들이 함께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촛불행진이 이어지도록 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제가 국민을 지키겠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지 못하게 소방수 공 급도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전남을 찾아 "박 대통령은 절대 스스로 그만둘 사람 아니다"며 "우리 역사에서 나라 팔아먹고, 분단시켜 이익 보고, 독재하고, 시민 학살하고, 부정부패 일으킨 사람들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다. 박 대통령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10%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될까 생각한다"며 최근 지지율 급상승에 따른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탄핵 이후의 헌정 질서를 질서 있게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밀서있는'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촛불집회에 참석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 범여권 인사들도 동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탄핵 카운트다운...새누리 갈등 이번주 중대 기로

찬반 놓고 계파갈등 최고조 상정시 집단 탈당 가능성 오늘 주류·비주류 6인 회동 비대위 구성 타결도 변수

'최순실 정국'이 중대 기로를 맞으면서 새누리당 계파갈등도 급증 중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와 특별검사, 국정조사 착수라는 굵직한 사안이 동시에 당을 덮치면서 대규모 탈당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까지 금주 내 마련돼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탈당 분위기는 한창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에 대한 찬반입장을 고려로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25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찬성할 의원이 40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집단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우리 당을 바꾸는 데 첫 번째 원칙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탄핵안 발의를 놓고 비주류와 이에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계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결국 집단 탈당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28일 주류·비주류 중진 6인 회동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가 타결되느냐 마느냐도 변수다. 비주류는 이정한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탄핵에 앞서 박 대통령의 당적을 정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왼쪽)과 황영철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동에 참석할 한 비주류 중진의원은 27일 "월요일 중진 6인 회동에서 비대위 문제가 풀 건너간다면 비주류 의원들의 집단탈당 문제를 본격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현 이정한 대표 체제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더라도 박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중진의원은 "새누리당 당적으로 탄

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서상의 문제로 탈당 후 탄핵안에 찬성할지 당에 남아 찬성표를 누를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와 오는 29일 까지 야권이 특검 후보 2명을 정하는 일정도 비주류의 탈당 논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대국민 메시지 내놓을까

검찰 수사·국정교과서 등 대응 관심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위기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자신의 운명을 가를 약재를 만나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주 초부터 검찰의 수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반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검찰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데드라인'으로 29일을 제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끈다. 일단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요 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검찰이 제3차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고민을 깊게 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법률 보좌를 책임진 최 수석과 사정라인의 또다른 축인 김 장관의 사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김 장관 사의가 완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공개 예정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의 '반기 모임'도 골칫거

리다. 청와대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김·인정 운명을 가를 약재를 만나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야당이 주 후반인 다음달 2일까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의 시름을 깊게 한다. 탄핵안 처리가 내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결 가능성이 커 직무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박 대통령은 특 검을 금주 중 자신의 손으로 임명해야 하고, 주중 본격화할 국회 국정조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28일 별도의 수석비서관 회의는 주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 표결 등에 앞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 형식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